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1월 20일, 이충원 의원 외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(2023년 2월 2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이충원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농어민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고,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지급대상에 도내 실제 거주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개정함(안 제6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진영)

가. 본 조례의 개정은

- 위장전입 등을 통한 농어민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고,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

나. 주요 내용은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(정의), 제5조(지급 대상), 제6조(지급 제외)를 개정함
- 제2조제3호의 “농어업인”을 “농어민”으로 개정함

용어의 정의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**농어민**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

나.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

다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

⇒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 부분에서 ‘농어민’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을 위해 개정이 타당함

- 안 제5조제1호는 도내 실제 거주에 관하여 규정함

⇒ 현행 조례는 거주 연속성을 명시하지 않아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있으며, 실제거주 조건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함

⇒ 안 제5조제2호는 제1호 개정안에 맞추어 기준일 등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개정이 타당함

- 1 -

- 2 -

금 제외 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인정됨

※ 관련법 위반자 지급제외 기간 : 5년(충남, 충북, 전북), 3년(인천), 2년(제주), 1년(전남)

제5조제1호 및 제2호 개정안

현행	개정안
제5조(지급 대상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. 1.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사람 2.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	제5조(지급 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농어민수당 1.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.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

○ 안 제6조제1호는 종합소득 금액에 따른 지급제외 대상선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자 함

⇒ 국세청의 전년도 소득자료 조회는 당해 연도 7월 이후 가능하므로 농어업인 불편(환수대상 선정, 추가자료 제출) 및 행정력 낭비(7월 이후 재조회 및 환수절차 이행)를 초래할 수 있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○ 안 제6조제2호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함

⇒ “신청 전년도”라는 표현은 기준이 모호하며,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1년만 제재하는 것은 타 보조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

⇒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제한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, 농어민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

- 3 -

개정안 제6조제1호~제3호

현행	개정안
제6조(지급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 1.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상인 사람 2.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3. (생략) 4. 신청 연도 이전에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수산업법」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. 6. (생략)	제6조(지급 제외) ----- 1.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----- 2.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. (현행과 같음) 4.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 -----사실이 있는 사람 5. 6. (현행과 같음)

○ 안 제6조제4호는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시함
⇒ 관련법 위반 시 지급제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영구적으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⇒ 제2호에서 ‘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사람’으로 규정하고 있고, 관련법 위반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함

- 4 -

개정안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어민수당 지급 제외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농어민수당의 지급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- 부칙은 농어민수당 지급 제외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
- ⇒ 개정조례 시행일 이전 농어민 수당 지급 신청을 한 자가 있는 경우,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부칙에 두어 조례 집행의 혼선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급을 위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
-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도내 실제 거주에 관한 규정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하여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또한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 제외대상 선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-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